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재명, 항소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결 뒤집어
추, 향후 정치 행보에 ‘탄력’... “국민을 위한 정치에 더욱 집중하겠다”
민중 전북도당도 “환영” 표명... “정치 보복 위한 국력 낭비 종식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6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며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으며, 향후 정치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었다”며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사법 리스크가 실제 없는 정치적 프레임이

있으며, 이번 판결이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정치 보복과 정적 제거를 위한 국력 낭비와 국론 분열은 이 대표에서 끝나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진행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줄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 여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그에게는 ‘전과 4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이라는 꼬리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26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5일 발생한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복구 상황 점검 및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정읍 산불 피해현장 찾은 김관영 도지사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이재민 지원 총력”

건축물 13동 피해 · 이재민 12명... 임시 거주시설 운영 · 전담공무원 배치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김관영 도지사가 정읍시 소성면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장에서 이재민 보호와 복구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산불은 지난 25일 오후 2시 14분경 고창군 성내면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일대로 확산됐다. 도와 소방 당국은 즉시 진화작업에 나서 같은 날 저녁 불길을 모두 잡았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 13동이 불에 타고, 총 12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재민들은 초기에 소성 구룡회관으로 대피한 뒤, 현재는 금동마을회관에 임시 거주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정읍시와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함께 전담 공무원을 1:1로 배치해 생활 전반을 말차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맞춤형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을 찾은 자리

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이재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는 화재 발생 당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수습에 나섰다. 현재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비용을 산정하고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산림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피해 복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 및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 재정지원과 주택 복구,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입은 임야에 대해서도 복구 사업을 추진해 환경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15일~4월 15일) 동안 예

방·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국 시도지사들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정부에게는 올림픽 유치 과정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본격 추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따라 타당성 분석 의무

스포츠 연구기관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의뢰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과 계약해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연구 및 분석 기관으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북의 대회유치 여건, 개최계획 검토,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정책성 평가 등을 포함해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타당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시 연대전략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천년고도 전북의 문화로 올림픽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며 기존·임시 시설을 적극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올림픽’, 친환경 건축 및 무공해 공

공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올림픽’ 실현으로 IOC의 개최지 선정의 핵심 원칙에 부합한 혁신적인 대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 조영식 단장은 “이번 사전 타당성 조사는 2036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개최를 위한 타당성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